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환경노동위원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대표성 반영 근거 마련〉
■ 정태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2418호)

2024. 11.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대표성 반영 근거 마련	3
※ 참고자료	6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6
2.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7

I. 제안경위

2024년 7월 31일 정태호의원이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8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의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별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두고, 기후과학, 온실가스 감축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함에 있어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와 관련 정책으로 인한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거나 받을 위험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중앙·지방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 위촉 시에 장애인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장애인의 현황과 권리 수준이 재고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III. 검토의견

1.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의 대표성 반영 근거 마련

개정안은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 위원 위촉시 장애인 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대표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5항 및 제22조제3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제15조(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u>노동자</u> ,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은 후 각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 <u>장애인, 노동자</u> ----- ----- ----- ----- -----.
⑥ ~ ⑨ (생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④ (생략)	제22조(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생략) ③ 지방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아동, 청년, 여성, <u>노동</u> <u>자</u> , 농어민, 중소기업인, 시민사 회단체 등 다양한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 여야 한다. ④ (생략)	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 <u>장애</u> <u>인, 노동자</u> ----- ----- ----- ----- ④ (현행과 같음)

현행법은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 위촉 시 아동, 청년, 여성, 노동자 등 다양한 사회계층으로부터 후보를 추천받거나 의견을 들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의 경우 기후위기 취약계층으로 기후위기로 인한 직·간접적 영향을 더 받고 있음에도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창구가 공식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측면이 있음.

특히 현재 2기 2050 중앙 및 지방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을 살펴보면 장애인 위원이나 장애 관련 전문가가 전혀 없는 상황으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고, 기후

위기가 또 다른 불평등¹⁾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 위원 위촉 시 장애인들의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기후위기 관련 정책 수립 시 이를 반영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입장을 고려하는 등 장애인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533

1) 정부 및 기업의 친환경 정책으로 인하여 1회용품 줄이기 정책 등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의 직접적인 매출하락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매출감소가 고용된 장애인들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음.

2) 한국장애인개발원, ‘탄소중립 녹색사회를 위한 장애계 대응 방안 연구’, 2022.10.

※ 참고자료

1. 2050 탄소중립위원회 민간위촉위원 구성현황

※자료: 환경부

□ 1기 탄중위 : 위원장(1) + 위촉직(78)

※ 중도 사퇴한 위원 포함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28명, 35%) · 남성(51명, 65%)	·
연령분포	· 10대(1명), 20대(2명), 30대(7명), 40대(10명), 50대(40명), 60대(19명)	· 청년(19~34세) : 6명 · 평균연령 : 53세
직능별	· 전문가(44명) * 학계 22명, 공공기관 22명 · 각계 대표(35명) * 산업계 12명, 시민사회 10명, 청년 4명 종교계 4명, 지자체 3명, 노동계 1명, 농업 1명	

□ 2기 탄중위 : 위원장(1) + 위촉직(32)

구 분	현황	비 고
성별비율	· 여성(7명, 21%) · 남성(26명, 79%)	
연령분포	· 30대(2명), 40대(4명), 50대(19명), 60대(8명)	· 청년 1명(김승완 교수)
직능별	· 전문가(27명) * 학계 19명, 공공기관 6명, 로펌 2명 · 각계 대표(6명) * 중소기업(2), 시민사회(2), 지자체(1), 산업계(1)	

※ 노동계 대표는 없으나, 한국고용정보원 본부장 선임

2. 광역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 자료: 환경부

구분	총인원	구성		민간현황							
		정부	민간	학계	시민단체	노동계	농업계	청년	산업계	시의원, 공공기관 등	기타
서울	40	10	30	13	2			5	2	공공(4)	법조인(2), 컨설팅(1), 학회(1)
부산	50	6	44	13	4			1	11	공공(13), 의원(2)	
대구	15	6	9	5				2	1	공공(1)	
인천	30	8	22	3	2				4	공공(9), 의원(1)	탄중센터(1) 의료계(1) 언론(1)
광주	50	7	43	10	2	2			12	공공(11), 의원(4)	금융(1), 의료계(1)
대전	20	6	14	6	1				1	공공(5), 의원(1)	
울산	27	3	24	1	3		1	4	4	공공(9), 의원(1)	산림조합(1)
세종	20	6	14	3	1			1		공공(7), 의원(2)	
경기	40	15	25	6	6				3	공공(5), 의원(2)	법조인(1), 언론(1) 금융(1)
강원	30	6	24	9	3		1		2	공공(8), 의원(1)	
충북	30	6	24	9	4		1		3	공공(4), 의원(1)	법조인(1), 언론(1)
충남	50	9	41	8	3			5	4	공공(16) 의원(3)	법조인(1), 금융(1)
전북	29	9	20	6	2		1		3	공공(4) 의원(3)	법조(1)
전남	40	15	25	7	3	1		4	2	공공(8)	
경북	24	7	17	4	3				5	공공(2) 의원(2)	산림기술인 (1)
경남	30	8	22	4	4		2	1	1	공공(8), 의원(1)	탄중센터(1)
제주	66	22	44	15	5		3	2	10	공공(8)	예술(1)